	보 도 자 료	
	작성	국토·지역정책연구센터 정우성 연구위원(044-960-0207)
	배포	국토연구원 대외협력·지식자산팀(044-960-0438)
보도일시	■ 2026.10.13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 (10.14(수) 조간)	

“인구감소시대,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재편해야”

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1084호 발간

□ **‘균형발전’** 개념은 “지역 간 사회·경제·문화적 여건과 삶의 질을 균등하게 조성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적 과정으로 이해” 되고 있지만 **합의된 정의는 부재**하다. 그렇기에 균형발전이 **지향하는 가치 또한 형평성·균형성·효율성·지속가능성 등으로 다의적으로 해석**될 수 있으며, **누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다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.**

□ 국토연구원(원장 임재만) 국토·지역정책연구센터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**국토정책 Brief 제1084호 “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”를** 통해 **인구감소기 시대에 요구되는 ‘균형발전’ 개념**을 재해석하고, **공간·낙후지역·인재·일자리·행/재정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추구할 핵심 가치를 도출**하였다.

□ 연구진은 우선 **전문가 대상 설문조사**를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**‘균형’의 정의를 파악**하고 **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**했다.

○ **(개념)**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‘형평성’에서 **‘형평성’과 ‘지속가능성’** 병행으로 이동

- 인구성장기의 ‘성장을 통한 분배(trickle-down)’·균등 배분 모델에서 **인구감소기의 ‘집중과 연결(Compact & Network)’·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 시급**

○ **(균형발전정책 성과)**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**기여를 인정(77.5%)하나, 효과성에 대해서는 80%가 ‘보통’에 그친다고 평가**

- 수도권 집중·지방소멸(55.0%)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(55.0%)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
- 바람직한 사업 선정·예산 배분 방식으로 ‘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’(60%)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, ‘지자체 자율성 강화’(5.50점/7점 만점)에 대한 동의도 높음

〈표〉 균형발전 개념의 재해석: 인구성장기 vs. 인구감소기

구분	인구성장기(집중과 확장)	인구감소기(집중형 분산·재구성)
기본 전제	• 성장 → 분배(trickle-down)	• 집중 + 연결(Compact & Network)
핵심 가치	• 형평성 중심(균등 배분)	• 지속가능성·형평성 병행
개발 방식	• 점적 개발(대규모 집중투자)	• 선·면적 개발(권역+네트워크 연결)
균형발전 대상	• 수도권-비수도권 간 균형	• 인구감소·소멸 대응 차등 지원
지역 역할	• 동질적 발전 추구	• 기능적 차등 역할 분담
거버넌스	• 중앙정부 주도	• 지방 주도 초광역 협력·네트워크

자료: 정우성 외 2025, 재구성.

□ 연구진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(일본・프랑스・독일) 균형발전 정책을 비교하여 **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네 가지 이슈 차원에서 제시**하였다.

○ **(공간 이슈)** 신규 거점 조성 중심에서 **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**가 부각되며, **비수도권 거점 역시 대도시를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**으로 지목

○ **(낙후지역 이슈)** 획일적 균등 배분에서 **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방식**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가와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, **부처별 분산 지원제도 통합화**가 최우선 과제

○ **(사람・일자리 이슈)** 지역에서의 청년 이탈이 최대 문제이며, **일자리는 '양' 보다 '질'이 핵심** 기준

○ **(행・재정 거버넌스 이슈)** 중앙 주도 관리에서 **지자체 자율성・성과중심 관리**로, 단년도 보조금에서 협약에 기초한 **다년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** 필요

□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**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**하였다.

○ **(공간 전략)** 초광역권・대도시권・중소도시권・생활권 등 다층 거점 체계 구축, 기존 거점 경쟁력 강화와 연결망 집중 투자를 통한 거점과 연계 전략 구현

○ **(낙후지역 전략)** 낙후도 복합지표(삶의 질・서비스 접근성・인구활력) 법제화 및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재원 배분, 부처별 지원의 통합・조정 강화, 환경보전・정주 역할 특화

○ **(사람・일자리 전략)** 산학일체형 인재육성・지방대학 R&D 파트너십, 외국인 정착 통합 패키지,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역 혁신기업 세제 지원・청년 정착기반 마련

○ **(행・재정 전략)** 초광역특별협약 다년도 패키지 예산(Block Grant) 전환, 성과목표 중심 자율 관리, 청년정착률・정주여건지수 등 삶의 질 성과지표 도입

○ **(국정과제 연계)** 5극3특・균형성장・초광역특별협약과 실천전략 간 정합성 확보, 협약형 거버넌스 활성화, 다양한 특구(메가・도심융합・기회발전 특구 등)와 일자리 전략 연계

□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**“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되어야 하며,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거점(비수도권 대도시 포함)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’집중과 연계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”** 고 강조하였다.

첨부. 국토정책brief 1084호(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 담당자(☎044-960-04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